/유토이미지

광란의 롤러코스터부터 루나 사태까지

무너진 신뢰에 투자자 '뚝'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시장

얼어붙은 가상자산 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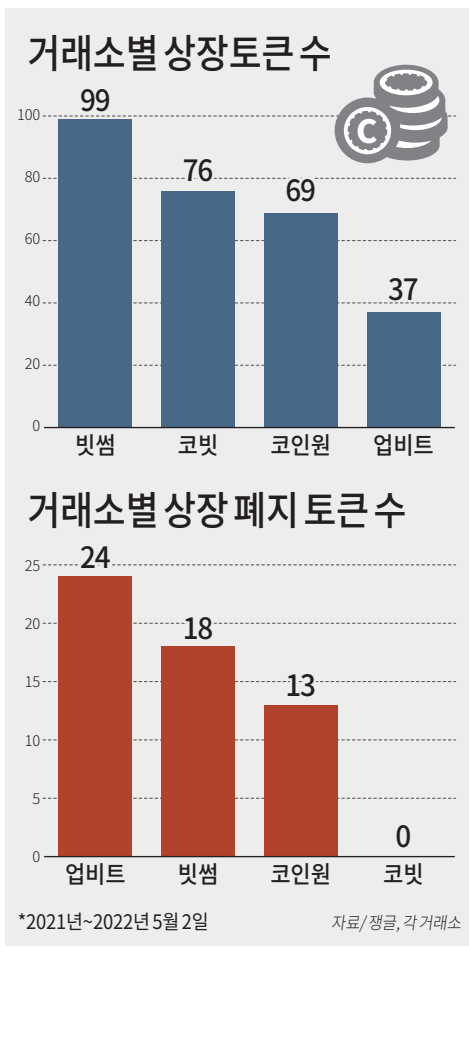
비트코인, 반년동안 3분의 1 수준 '급락'
투심 악화 속 루나사태까지 더해져
거래소 실적 뚝… 빗썸, 영업익 반토막

거래소별 규정 모호해 혼란 가중
업계, 자율 개선안 계획 마련 나서
자율성 제한 등 놓고 의견 분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가 악재가 겹치면서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유동성 장세가 사실상 끝을 내리며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상자산도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반년 동안 3분의 1 토막 나면서 2만달러선까지 추락했다. 코인 광풍 현상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 순위 6위까지 올랐던 루나(LUNC)의 가치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초대형 악재까지 더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신뢰도까지 의심받으며 사실상 '시즌 종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타개책으로 자율개선안 마련에 나섰지만 등 돌린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투자심리 악화에 거래소 영업익 '반토막'

16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개당 2만20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중 한때 6만9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7만달러 돌파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큰 반등 없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의 급락은 거래소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국내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28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21억원) 대비 46.9% 감소한 수치다. 또한 순이익도 2068억원으로 전년보다 64.1%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빗썸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845억원이었다. 2178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 급감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48억원,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1%, 79.2% 줄었다.

올 들어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이용자들의 거래가 줄었고, 이는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앞서 공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각 거래소 수익의 약 99%가 거래수수료를 통해 발생한다. 결국 이용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야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약세장 속에서 이용자들의 거래가 줄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거래소별 제각각 규정에 이용자 혼란 가중

투심 악화 속에서 '루나사태'까지 터졌다. 업계 특성상 단일 거래소가 아닌 복수의 거래소가 운영되는데 거래소별로 각기 다른 대응 방안을 취했다. 결국 루나의 가치가 불과 하루 이틀새에 99% 이상 폭락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대응방법은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국 이용자의 피해로 번진 것이다.

루나 사태 이전부터도 각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쟁글에 따르면 4대 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올 5월2일까지 신규로 상장한 가상화폐는 총 281개다. 각사별로는 빗썸이 99개, 코빗 76개, 코인원 69개, 업비트 37개 순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상장 폐지한 가상화폐 수는 24개(업비트)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들이 수 십개의 코인을 한꺼번에 상폐를 결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요건에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거래를 지원해온 수십개 코인에 대해 '유의종목'을 지정했으며, 이후 상폐까지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코인의 시세가 하루 동안 수십 퍼센트가 급락을 거듭하하는 '상폐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문가들 "2018년 대책에서 진전 안보여"

결국 업계에서도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하고 공동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자율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당정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어 지난 13일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지원, 유통, 거래종료 등에 대한 공통 규율방안 마련의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 규제안 계획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자율규제안 계획안에 대해 앞선 2017~2018년 '가상화폐 1차 폭락' 사태에 제시됐던 자율규제안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여전히 국회나 정부부처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추상적이고 모호한 해법들만 제시됐다"며 "정작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지닌 루나·테라 책임자 대신에 거래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번 자율규제안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도 성장 초기에 불과한 산업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최 에반젤리스트 역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산업 특성상,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한국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이며 "상장 규정의 통일화 보다는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방지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1면 '구속력 없는 자율개선안'서 계속

거래소 26곳 중 5곳만 참여

주식시장의 신규 상장에 해당하는 '거래지원'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술적 효율성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각 프로젝트(가상자산)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신규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업계 신뢰도 회복이 시급해진 만큼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며 "공통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각 거래소의 사업 차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규 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시세의 급격한 변동 시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해 투자 주의를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루나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국내 거래소가 공동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대응안이 원화마켓으로 등록한 5개사만 참여해 코인마켓 거래소 투자자는 소외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총 26개 임에도 자율규제안에는 원화마켓 거래소인 5대 거래소만 참여했다"며 "향후 협의체 구성 논의 단계에서 나머지 21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석 기자